

개인대출 — 소호대출

[뉴스] 고가 전세대출 옥진다 SGI서울보증 '보증제한' 검토 02



Economy

코스피	2983.22 (+7.51)	코스닥	1001.43 (-3.57)
금리 (우대금)	2.040 (+0.004)	환율 (원/달러)	1182.60 (+1.00) (4일)

m-커버스토리

보이지 않는 곳의 전쟁... 속옷 세대교체

재편되는 언더웨어 지형도

BYC·쌍방울 등 토종 업체 2016년 이후 매출 하락세

슬림9·더잡 등 신생 브랜드 온라인 특화로 무서운 성장



쌍방울 본사 매장 전경.

/쌍방울그룹

전통 속옷 기업들이 매출 신장을 멈춘 가운데 스타트업에 해당하는 신규 속옷 브랜드들이 빠른 성장세를 이루는 등 최근 국내 속옷업계 지형도가 흔들리고 있다.

〈관련기사 4면〉

1950년대부터 한국내의 및 잠옷 제조 산업을 이끌어온 토종 기업 BYC는 지난 2018년 약 1971억원에서 2019년 1696억원, 지난해인 2020년 1609억원의 매출액(연결 기준)을 기록했다.

코스피 상장사에 해당하는 쌍방울은 2018년 953억원, 2019년에는 880억원, 작년에는 895억원 가량이라는 지지부진한 매출액을 기록했다.

2019년 쌍방울에 인수된 비비안은 2018년 약 1831억원, 2019년 1768억원, 지난해에는 1656억원 가량의 연도별 매출을 기록했다.

세 기업 모두 국내에서 내로라하는 속옷 브랜드를 운영해왔지만 최근 매출 하락세에 들어서거나 성장을 멈춘 듯한 모양새다.

BYC의 매출은 2016년을 정점으로 점차적으로 하락 곡선을 그려왔으며 쌍방울은 지난해에 기대를 밀도는 성적표를 받아들며 적자 경영을 탈피하지 못했다. 비비안으로 여성 언더웨어 라인업을 확장하며 업계 1위인 BYC를 위협하긴 했지만 괄목할만한 발전이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고 말하기에는 부족하다.

이는 해외 속옷 브랜드가 물려옴과 동시에 국내에 경쟁사가 될만한

신규 브랜드가 무서운 속도로 성장했기 때문이다.

2017년부터 속옷 브랜드 '슬림9'을 운영하는 커뮤니케이션엔컬처는 지난 2018년 100억원대의 매출로 시작해 2019년 220억원, 2020년 350억원 가량의 매출을 달성하며 몇년 사이 급성장하고 있다. 생활용품 브랜드 등도 보유한 커뮤니케이션엔컬처의 매출 대부분은 현재 슬림9에서 발생하고 있다.

하루 매출 20만~30만원에서 출발한 스타트업의 언더웨어 브랜드 '더잡'도 지금은 연매출 200억원, 직원 수 50여 명 규모의 회사로 급성장했다.

론칭 7년 차를 맞은 컴포트랩의 '컴포트랩'은 지난해 연매출이 190억원에 달했으며, 역시 스타트업 블랭크코퍼레이션이 3년 전 론칭한 '비비비'의 지난해 추정 매출은 60억원 수준이다. 올해는 100억원 정도의 매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중견 기업에 속하는 기존 속옷 기업 매출이 1000억원대에서 고전하는 가운데, 등장한 지 4~5년 이내인 신생 언더웨어 브랜드들이 중견기업 매출의 최소 10%에서 많으면 40~50%까지 따라잡으며 업계의 위상을 뒤흔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자기몽금정주의 현상으로 인해 편한 속옷들이 각광받으며 등장한 신생 속옷 브랜드들은 온라인 유통에 특화돼 있으며 트렌드를 반영한 상품이나 차별화된 마케팅, 디지털 테크 등을 접목해 성과를 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신생 브랜드들의 선전으로 속옷 업계에서 최강자를 내세울 수 없을 만큼 한 자리수 정도로 작게 조각나 있던 시장 점유율에도 향후 변동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원은미기자 silverbeauty@metroseoul.co.kr

軍 이동식방호벽 감사원 철퇴에도 '특혜성 수의계약'

군 당국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비리의혹이 제기된 '이동해체식 방호벽(이동식 방호벽)' 사업을 비공개 수의계약으로 이어가고 있다.

4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지난 8월 광주·전남 지역을 방위하는 육군 31사단은 이동식 방호벽의 제조 및 납품 업체가 복수인 것을 알고도 특정업체의 제품을 한정해 구매하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했다가 감사원과 국정감사 지적을 받았지만 수의계약을 밀어붙이고 있다.

◆사격장 사망사고 계기 군에 도입... 문제 제기는 묻어

이동식 방호벽은 2017년 9월 발생한 '6사단 사격장 사망사고' 이후 군 당국이 도비탄(물체에 맞고 튀어오른 탄)을 예방하기 위해 사격장 방벽으로 군이 도입한 장비다. 이 장비의 구매예산은 50억원에 불과하지만, 국방 중기예산에 반영된 시설공사 예산은 총 1000억원에 달하는 사업이다.

육군 31사단 '이동식 방호벽' 납품업체 국정감사 지적에도 수의계약 밀어붙여 일반경쟁입찰 권고했지만 또 편법 이용 군 내에 '이권집단' 존재 의혹도 커져

이동식 방호벽 도입은 군안팎에서 사업 초기부터 '의혹의 눈초리'를 받아온 사업이다. '도입 타당성'과 '예산 심의의 적절성' 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돼왔기 때문. 본지는 지난 2019년 12월 29일 최초 단독보도 이후 2년 넘게 국방부와 각 군에 관련 질의를 통해 문제를 전달했지만, 컨트롤 타워적인 국방부와 국방부 시설분부는 침묵만을 지켜왔다. (지난달 26일자 [단독]1000억원 규모 군납비리, 모르쇠 작전으로 일관한 국방부' 참고)

군 당국은 이동식 방호벽을 독점에 가깝게 납품해온 A사가 2017년 12월부터 이동식 방호벽의 특허권이 없어, 수의계약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이미 알았다. 그렇지만 육군을 비롯한 군 관계자들이 엉뚱한 답변으로 해명해 왔다.

본지도 지난 2년간 A사의 특허권 도용 및 계약조건 미이행 등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군 당국에 제시했으나, 국방부는 감사원의 감사 최종의결이 나온 사실도 숨겼다. 지난달 26일 국회 국방위 소속 조명희 의원(국민의 힘)이 감사원 최종의결 결과를 공개하자 그제서야 국방부는 "이동식 방호벽에 대한 조치를 진행 중"이라는 짧은 입장만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해 6월 국방부와 국방부 시설본부, 육군 등을 상대로 감사를 실시했고 같은 해 8월 사실상 감사내용을 거의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2면에 계속)

/문형철 기자 captinm@

'반도체 공급망 정보' 美 제출 D-3

삼성·SK하이닉스, 기밀유출 우려에 막판 고심 중

제출 요구사항 다소 완화됐지만 업계 특성상 민감한 내용 드러나

반도체 업계가 공급망 관련 자료 제출을 앞두고 막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요구 사항을 다소 완화했음에도 기밀 유출 우려는 여전히 적지 않은 가운데, 정부도 협상에 나서려는 모습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오는 8일까지 미국 상무부에 공급망 정보를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주요 반도체 업체들에 최근 3년간 매출과 고객, 재고 등 현황을 요구한 바 있다.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에 대응해, 공급망 투명성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는 이유다.

업계에서는 미국측 요구가 영업 기밀을 포함하고 있다고 난색을 표했다. 특히 고객사 정보는 영업비밀이라 자칫 법적 분쟁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에 따라 미국측은 고객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대신, 산업별로만 제출하도록 기준을 완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제출하지 않겠다고 대만 TSMC도 다시 제출에 응하기로 입장을 바꿨다.

그럼에도 반도체 업계는 여전히 민감한 내용이 드러날 수 밖에 없다는 분위기다. 반도체 업계 특성상 산업별 공급 정보만으로도 고객사 현황을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판매 가격이나 재고 수준 등은 가격을 정하는데 중요하게 활용된다. 고객사들에 정보가 유출되면 가격

협상에서 불리하다는 얘기가. 주요 고객 중 상당수가 미국 기업인데다가, 정보 취합 이유가 현지 공급망 안정화인 만큼 유출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기술 유출 가능성도 있다. 생산 장비와 시설, 생산 제품과 공급량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공정과 수율 등 주요 사업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 설명이다. 미국이 이 정보를 활용해 현지 생산 시설 및 투자에 반영하면 국내 반도체 업체를 압박하는 것도 가능하다.

중국과의 거래도 문제다. 중국 매출이 적지 않은 상황, 구체적인 자료 공개는 미국이 중국 공급을 줄이라고 압박할 근거가 될 수 있다. 중국에서 미국 측에 민감한 정보를 넘겼다고 문제를 제기하면 난감한 상황이

처할 수도 있다.

일단 국내 반도체 업계는 정보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미국 측이 제출 여부를 자율에 맡기겠다고는 했지만, 추후 강제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강도 높게 압박하고 있어서다. 최대한 민감한 정보를 제외한다는 방침이라도 주요 정보를 완전히 제외할 수는 없을 전망이다. 정부도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이달 중 미국에 보내 상무부 장관과 협의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실효성 있는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업계가 내부 정보 보안에 크게 예민한 이유는 작은 사실 만으로도 많은 정보를 이끌어낼 수 있어서다"라며 공급망 정보 공개 자체에 우려를 표했다.

/김재용 기자 juk@

뉴스터미널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한-헝가리 정상회담... 文 “전기차 배터리 등 유망산업 교역확대” /사진 뉴시스 ▲ 靑 “김정은 첫 종전선언 언급, 의미 작지 않아”

▲ 국힘 후보 선출 D-1... 윤석열·홍준표 27% ‘동률’ ▲ ‘원전병행 탄소중립’ 논란 일축한 靑... “탈원전 변함없다”



▲ 與 “11일 본회의서 광상도 사직안 처리” ▲ 안철수 “1호 공약”... “5개 초격차 기술 육성해 G5 진입” /사진 뉴시스